



본란의 기사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일간 무역」에서 발췌 게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Tel : 551-5454)로 연락바랍니다.

1. 미국, 반덤핑법 개정 움직임

클린턴 미국 정부가 반덤핑법을 개정, 구소련의 대미수출을 간접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클린턴 정부의 이같은 개정안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기준을 위한 미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시됐다.

현행 반덤핑법에 따르면 구소련 공화국들이 제3국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수출을 통한 경제개혁 추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미국 반덤핑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반덤핑 코드에 따라 광범위한 수정 작업에 들어가 있다.

미하원 무역소위에서 수전 에서먼 미상무차관보가 설명한 반덤핑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소련국가 등 아직 시장경제 체제가 성숙하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반덤핑법 적용을 면제하고 이들 국가의 덤핑수출에 대한 미업체의 제소시 산업피해 판정에 있어서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소련산 덤핑판매에 따른 미산업피해시에는 종전에 구소련산 알루미늄, 우라늄 등에 적용돼 온 수입제한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분석가들은 반덤핑법이 개정될 경우 구소련산 제품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반덤핑관세 부과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소련국가들에 대한 미정부의 외교정책상 문제들

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은 의회내 강경파들에 의해 저지될 공산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북미 FTA 조기확대 시행

미국은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시행된 지 6개월에 접어들면서 양국간 교역이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우려했던 실적사태도 거의 야기되지 않는 등 큰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NAFTA의 확대시행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WSJ)지는 특히 NAFTA 시행에 강력히 반대했던 AFL-CIO(미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 측도 뉴멕시코에서 열린 미·멕시코간 심포지엄에 적극 참여, 양국 전자업체의 건강 및 안전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등 NAFTA를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이 1·4분기중 9.4%나 늘어나면서 대멕시코 무역수지흑자가 지난 해 4·4분기의 4,000만달러에서 5억 6,000만달러로 증가하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긴 했지만 NAFTA시행 후 멕시코에서 무장봉기, 대통령후보 암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실제로 NAFTA 성공 평가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멕시코의 폐소화가 평가절하되고, 경기가 침체될 경우 미국의 대멕시코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증가세

는 반전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 일본, 반도체 디바이스 해외조립공장 생산력 증강

일본 관련업체에 따르면 동지는 말레이시아 소재 공장확장을 연내에 마무리 짓고 민생기용 개별반도체와 바이폴러IC를 증산하는 외에 16메가D램의 조립생산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NEC는 16메가D램의 수요확대에 대비, 아일랜드 공장과 싱가포르 공장의 조립능력을 확대키로 했다.

세이코엡슨은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싱가포르의 신공장동에서 다핀QEP조립을 개시했다. 월산규모는 100만개이다.

일본 디바이스 메이커들의 이같은 해외공장 생산능력 증강은 중국·동남아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특히 후공정을 통한 웨이퍼 조립은 해외공장에서 의욕적으로 확대할 태세이다.

동지 일렉트로닉스 말레이시아사에서 개별 반도체·민생기용IC·4메가D램을 조립생산하고 있는 동지는 현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공장 등을 건설, 대폭의 증산을 단행키로 했다. 당분간은 기존제품을 중심으로 증산하다가 양산체제가 갖춰지면 16메가D램 등 메모리제품의 조립 생산도 실시할 예정이다.

NEC는 16메가D램의 증산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웨이퍼 생산량을 미로즈빌 공장과 영스코틀랜드 공장에서 늘림과 동시에 조립공장인 아일랜드 공장과 싱가포르 공장의 조립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일랜드 공장에선 신공장동을 건설하고 있으며 가동되면 조립능력은 현재의 1.5배인 월산 450만개 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립제작소는 말레이시아 공장에 매년 수십억엔을 투입해 조립라인을 강화한 뒤 16메가D램 등 메모리와 마이컴을 증산할 예정이다.

4. EU, 한국산 대형축전기 반덤핑관세 확정

EU 외무장관들은 지난 6월 13~14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지난 6월초 EU 집행위가 상정한 한국 및 대만산 대형 축전기에 대한 반덤핑 확정관세 부과안을 공식 채택하고 EU 관보 OJL 152호('94년 6월 18일)로 이를 공식 발표했다.

EU 이사회가 확정된 한국 및 대만산 대형 축전기에 대한 반덤핑 확정관세는 한국산에는 70.6%가 부과되고, 대만산에는 10.7%가 확정된 Kaimei Electronic Corp.를 제외한 여타 업체에는 75.8%로 향후 5년간 동률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다.

EU 집행위는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 이후 덤핑 마진, EU 산업에 대한 피해 등에 대한 수출입 업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잠정관세 부과와 동일한 율의 확정관세 부과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구성가격 산정시의 문제점, EU 축전기 시장에 대한 뚜렷한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덤핑 확정관세안의 조정을 요구한 대만의 경제 문화부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반덤핑 관세가 확정된 대형 축전기는 용량이 8천~55만 마이크로 콜롱이며, 전압이 160V 이상인 제품으로 추가 관세가 70.6%의 고율로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VCR, 소형 컬러 TV, 반도체, 비디오 및 오디오 테이프 등 한국산에 부과해 온 반덤핑 확정 관세중 최고 수준이며, 앞으로 이들 제품의 대EU 수출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EU 집행위의 반덤핑 절차는 Philips, Poederstein 등 EU 역내 축전기 업체의 제소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고율의 반덤핑 확정 관세안을 제출한 것은 한국은 물론 대만업체들이 조사과정에서 비협조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우리업체는 금번 경우를 모델로 EU의 반덤핑 절차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한편, EU 반덤핑 절차가 개시될 경우에는 대응자료 제출 등 조사과정에도 적절히 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 EU, 환경보호규정 강화 전망

EU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EFTA 회원국이 EU 회원국이 되면 EU 환경규정이 이들 나라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양측의 환경규정상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4년의 유예기간 동안 가입후보국보다 미약한 EU의 환경규정을 재검토해 새로운 환경규정을 제정할 계획인데, 소위 '수평적 해결책'이란 방법을 채택, 새로운 환경규정을 가입후보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아직까지 가입후보국들의 수준으로 환경보호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정해지지 않는 분야에서는, 4년간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EU가 가입후보국의 높은 환경규정을 계속 적용하면서 이 기간 동안 EU와 가입후보국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 EU의 환경규정을 검토해 EU 환경규정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와 스칸디나비아 3국이 예정대로 EU 회원국이 될 경우, 이들 국가와 강력한 환경규정 채택을 지지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으로 EU 환경규정 강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6. OECD, 대대적인 고용촉진계획 채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은 최근 파리에서 열린 각료이사회에서 3,500만명에 이르는 선진국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60여가지의 권고사항을 담은 고용촉진계획을 채택

했다.

OECD 회원국은 최근 수 년간에 걸친 기술진보와 교역 및 투자확대 등으로 인해 선진국내 고용기회가 확대됐으나 노동시장의 개혁조치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회가 충분히 활용될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대대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OECD는 실업자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로 인해 근로자의 노동의지가 위축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엄격한 실업수당 수혜자격 기준 설정 및 단체협약의 탄력성 제고 등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유럽에서 실업해소를 위한 임시방안으로 적극 도입되고 있는 일자리 공유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무역장벽수단을 동원하여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오히려 소비자 및 기업 모두에게 부담만을 가져다 주고 국가독점과 부작용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 시행에 신중을 기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의 분야별 주요권고 사항은 ▲ 기술노하우개발 및 확대도모 ▲ 근로시간 탄력성제고 ▲ 기업환경 개선 ▲ 임금 및 노동비용 탄력성 제고 ▲ 노동관련 세금경감으로 비임금비용 축소 ▲ 고용안전규정 개혁 ▲ 노동시장정책 확대 및 활성화 ▲ 노동력의 질적개선 ▲ 실업 및 관련 수혜제도 개혁 등이다.

7. EU, 박람회 전시품목에 GSP 추가 공여

EU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Phatners in Progress' Fair"에 참가하는 개도국산 GSP 수혜 대상품목에 대해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공여한도의 6%까지 추가로 공여해 주기로 결정했다.

EU가 EU 이사회규정 1290/94(L141/6.4)호를 통해 밝힌 GSP 추가 공여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추가 공여시기 : '94년 6월 8일 ~ '95년 12월 31일까지

- 추가 공여품목 : 이사회 규정 3831/90에 속하는 일반 공산품, 이사회 규정 3832/90에 속하는 섬유류로 전시회에 참가해 판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제품

- 추가 공여량 : 기존무관세확정물량(Fixed Duty Free Amount : FDFFA), 실링의 6%

- 제출 서류 : GSP Form A, 판매 계약서 (독일 관련 당국의 인증을 필요로 함.)

- 공여제의 품목 : Cat 1, 2, 3, 4, 5, 6, 7, 8에 속하는 품목으로 FDFFA 적용 대상국산 섬유류, MFA 대상 한국산 섬유류, 기타 이사회 규정 1290/94호 Annex상의 품목

EU는 이와 같은 조치가 개도국산의 EU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실은 독일 정부가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개도국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EU에 GSP의 추가공여를 요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번 규정에 명시된 GSP 추가공여 제외 대상 품목을 제외하고는 금년 상반기에 이미 GSP가 소진된 품목도 베를린 전시회에 전시, 판매될 경우 추가로 GS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중국, 통신부문에 대규모 외자투입

중국 우전부는 지난 '84년이후 56억 7,000만달러의 외자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전부는 '95년말까지 21억달러의 외자를 추가로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제9차 5개년 계획기간('96~2천년)에는 총 50억달러의 외자유치를 계획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 외자의 도움으로 우전부는 약 1680만회선의 프로그램 통제형 전화교환장비와 100만회선의 장거리 교환장비를 도입했으며 약 2만km의 고급 광통신 케이블 라인과 1만5천km의 디지털 마이크로 웨이브 통신라

인을 건설했다. 이밖에도 18개의 지상 위성국과 28개의 자동 문서배분회선을 설치했다.

통신시설의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일련의 특혜정책을 마련해 외자이용면에서 통신업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외국인 협력부문에 관해 우 부장은 통신사업의 직접관리에 참여하거나 주식구입을 통한 경영참여 이외에도 과학적 연구, 교육, 상품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장비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의 협력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9. 중국의 GATT 가입조건협상 타결 희망

피터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은 향후 수주내로 중국의 GATT 및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조건에 대한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서덜랜드총장은 지난주의 방중결과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GATT 가입문제에 대해 중국 최고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진 결과, 중국이 금년내로 GATT에 가입하는 문제는 어려운 점이 없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방중기간중 GATT 가입조건에 대한 협상에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점에 크게 고무돼 있다면서 향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같은 협상을 추진할 여지를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내년 1월 1일 발족예정인 WTO에 중국이 창립멤버로 가입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한 최종협상의 타결이 향후 수주내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덜랜드총장은 다만 제한된 시간내에 협상을 타결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지도자들은 자신과의 이번 회담에서 특히 미국의 대중최혜국지위 갱신문제를 GATT 가입의 최대장애물로 거론했

다고 밝혔다.

10. 중국, 컬러TV수요 계속 증대

중국에서 컬러TV에 대한 수요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

통계치를 보면 지난 해 중국 시장에서 컬러TV 판매량은 659만 2,500대에 달해 전년대비 17.4% 증가했다.

농촌 및 중·소형 도시지역이 18인치 및 20인치 컬러TV수상기의 주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도시지역 소비자들은 수직 평면브라운관이 부착된 리모콘 방식의 대형 스크린 컬러TV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대형 스크린 TV수상기가 가격면에서 수입제품보다 싼 것으로 인식되면서 이미 다수의 소비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흑백TV의 판매량은 지난 해 607만 2,400대를 기록했으나 전년에 비해 10.72% 감소했다. 현재 농촌지역의 8,000만가구가 TV수상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농촌지역이 흑백TV에 대한 잠재수요가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 브라질, 7개품목 관세인하

브라질 재무부는 관보를 통해 포장용지·청소용품 등 7개품목에 대해 관세를 종전 20%에서 0~2%로 대폭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관세가 인하된 품목들은 브라질 국내시장에서 최근 들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품목들이다.

무공 상과울루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이번 관세인하조치는 7월 1일 화폐개혁을 앞두고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 데 이번 관세인하 품목은 다국적 기업에 의해 독과점으로 공급되는 품목들로서 품질에 비해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품목의 수입급증이 예상된다.

(단위 : %)

H.S. Code	품 목	종 전	현 행
4804	크라프트 라이너, 지대용 크라프트지 등	20	2
4805	반화학 후로팅지 등	20	2
4808	파지와 판지, 지대용 크라프트지 등	20	2
4819	지제 또는 판지제 상자류 등	20	2
4823	천공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록된 통계, 회계 기재용의 카드	20	2
6805.30	섬유제품, 지·판지를 부착한 스펀지	20	0
0201	소고기	20	0

12. 외국의 대베트남 투자 큰 활기

외국인들의 대베트남 투자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베트남 국영협력투자위원회(SCCI)는 지난 1·4분기중 외국인투자 승인액은 8억 2,700만 달러로 전년동기에 비해 58%나 늘어 지난 '88년 외국인투자 개방조치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SCCI측은 또 이 기간중 투자승인사업은 71건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 지속되면서 금년말까지는 투자승인액이 3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88년 이후 SCCI가 승인한 외국인투자규모는 총 964건에 94억달러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 가운데 150건, 7억 2,500만달러의 규모의 투자승인건에 대한 허가최소 조치가 취해진 바 있는 데다 아직까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도 많아 외국인투자 이행 규모는 승인실적에 크게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공업부문의 투자승인액이 34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호텔 및 관광사업이 18억 달러, 석유 및 가스사업이 13억달러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가별로는 대만이 127건에 16억달러로 제1의 투자국으로 부상했으며 홍콩이 148건

15억달러, 한국이 66건 7억 100만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13. 싱가포르 통신사업 개방

싱가포르 전신관리국(TAS)이 21세기를 겨냥, 통신자유화 구상을 최종 마무리지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이번 구상은 자국내 이동전화기와 무선호출기 사업참여에 관한 지침과 아울러 싱가포르를 아시아의 통신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위성통신 산업을 자국의 독점기업인 싱가포르 텔레콤 이외에도 개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각국 TV 방송국이 채널 및 중계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싱가포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TAS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내 통신사업과 관련, ▲ '97년 4월 이후 이동전화기에 대해서는 2개사, 무선호출기에 대해서는 3개사 이상의 시장 신규참여를 허용하되 ▲ 어느 경우든지 현지 기업이 51%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TAS의 구상은 오는 '97년 이동통신사업, 2007년 지상 회선에 의한 국내·국제 전화사업 개방과 관련한 기존방침을 토대로 세목이 정해진 것으로 경제영역의 사업분야에서 신규참여를 앞당겨 진행시킨다는 방침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밖에 위성이용에 의한 이동통신 사업에 대해서도 자유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14. 이란, 수입통제 크게 강화

이란 정부는 최근 외환 사정악화와 자국 통화의 가치하락에 대처, 수입에 대한 통제를 크게 강화했다.

이란 외환위원회는 지난달말부터 새로운 수입제도를 도입, 수입자들이 모든 수입상황을 통상부에 반드시 등록한 후 수입을 추진토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외

환을 획득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수입통관을 할 수 있도록 수입통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20일 이전 은행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수입오더는 전면 취소,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그러나 공식환율과 암거래시장 환율 가운데 어느 환율을 각 은행이 수입자들에게 외환을 매각할 때 적용토록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이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원유시세 하락 및 판매부진 등으로 정부기관들조차도 암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해야 할 정도로 악화된 데다 이란통화인 리알화의 가치마저 크게 하락하고 있는 데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이란 금융당국은 외환수요를 부추겨 리알화 시세하락을 촉발시키고 있는 암거래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암거래 시장이 날로 번창해지면서 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이 조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이란수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를 통한 재수출이 결정적으로 타격받는 것은 물론 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미행정부관계자는 내다봤다.

15. 루마니아, 외국인 투자법 추가개정

작년 5월 1차례의 개정을 거쳤던 루마니아의 외국인 투자법이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거액의 외국투자자 유치 차원에서 또다시 개정중에 있다.

현재 상하양원의 합의를 마치고, 대통령의 서명, 발효만을 남겨놓고 있는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5,000만불 이상, 생산품의 60% 이상의 현지조달, 그리고 연간 생산고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합작기업에 국한하고 있다.

개정되는 외국인 투자법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외국인 투자가가 수입하는 기계, 시설물은 물론 원자재, 부품 및 액세서리 등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7년간 관세를 면제하고, 둘째 이윤발생후 5년간 이윤에 대해 면세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면세혜택에도 불구하고 등록일로부터 14년 이내 외국 투자자본이 5,000만 불 이하로 축소되거나, 청산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상기의 면세액을 전액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번 외국인 투자법 개정은 작년 루마니아의 승용차 제조업체인 Olcit사와 대규모 승용차 합작생산 계약을 체결한 우리나라 D사

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외국인 투자법의 개정은 그간 외국인 투자의 실상이 소액투자에 국한되어 있고, 대루마니아 거액 투자를 약속한 외국기업들이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요청함으로써 루마니아 정부가 국내의 고용증대, 기술이전 등 긍정적 측면을 겨냥해 발안한 것이다.

루마니아 정부는 금번의 외국인 투자법 개정으로 인해 현행 소액중심의 외국인 투자패턴을 대형으로 유도해 외국인투자를 대폭 늘리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과거와 대비해 대규모 투자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사용어 ⑤

금융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채는 장기융자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따라 발행된다. 이점이 비교적 단기융자를 위해 시중자금을 흡수하는 일반 금융기관 예금과 다르다.

금융채의 종류로는 할인금융채와 이표부 금융채가 있다. 금융채는 일반적으로 무기명 채권으로 발행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

은 ▲ 산업은행(산업금융채권), ▲ 장기신용은행(장기신용채권), ▲ 중소기업은행(중소기업금융채권), ▲ 주택은행(주택채권) 등이다.

금융채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정부보증채(특수채) 등과 함께 국공채로 불린다. 이는 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는 보증사채·일반사채·담조부사채·전환사채 등 회사채와 구별된다.